‘환풍구 참사’ 안전문제 국감 최대 이슈

野 “박정부 실패” 與 “적폐”

국방위, 방사청 국감서 ‘군피아’ 질타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계기로 안전 문제가 국정감사 종반 최대 이슈로 재부상했다.

여야는 20일 국토교통위와 안전행정위 등 안전사고 문제와 직결된 상임위에서 ‘후진국형 참사’가 잊을 만하면 재발하는 근본 원인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와 환풍구 추락 사고 등 잇따른 대형 사고를 박근혜정부의 실패로 규정하려 했지만,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에서 원인을 찾으려 했다.

일단은 국토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서울 시내 각 지역에 있는 환풍구들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하고 조속히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제2 롯데월드 인근 지역 도로 함몰과 관련해선 지하 건축물 난립과 하수관 노후화를 ‘싱크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종합 대책을 주문했으며, 전동차 노후화로 최근 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도 꼼꼼히 점검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환풍구 2천418개 중 73%가 사람 통행이 잦은 보도에 설치됐음에도 환풍구 설계 기준은 20년 전 마련된 시장 방침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기춘 국토위원장은 “세월호 사고 후 더 안전한 사회가 요구되는데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안행위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오후 국감에서도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와 유사한 성격의 안전사고가 재발할 가능성과 대책 등을 점검했다.

앞서 안행위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서는 네이버의 메신저 프로그램인 ‘밴드’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의 검열 논란과 관련, 밴드 대표를 비롯한 이들 업체 관계자들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통영함 납품 비리에서 드러난 방위산업체와 군의 유착 관계가 쟁점이 됐다. 특히 전역 후 곧장 방산업체에 취직해 결탁하는 이른바 ‘군피아’의 폐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방사청은 뻥튀기 사업비 편성, 엉터리 목표가격 산정에 대한 제어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면서 “방사청 팀장 한 사람과 실무 장교만 짜면 모든 게 멋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각군 전력 부서에 근무했던 제대 군인이 방산업체에 취업하고 심지어 퇴직 다음날 취업한 예도 있었다”면서 “방산 비리는 결국 군피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이자 적폐”라고 말했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정위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산하·감독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공피아(공정위+마피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완구·우윤근 오늘 회동…‘세월호 3법’ 처리 논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 법 등 ‘세월호 3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내일 우 원내대표가 세월호 3법 처리를 위해 이 원내대표와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안전에 여야가 없으며, 야당과도 정책적 대안 마련에 함께 나서겠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을 반드시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 졌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인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유가족 참여가 어떤 형태로든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이버 검열 등 호된 질책…예산 지역균형 촉구

국감 인물 새정치 장병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장병완 의원(남구)이 사이버 검열 문제, 제2 단통법 논란, R&D예산의 지역편중 문제 등 굵직한 이슈들을 제기하면서 정책통으로서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지난 13일 미래부 국감에서 국가기관의 현행법을 넘어서는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에 대해 입법조사처 자료를 제시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국내 ICT 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지적, 부처 관계자들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장 의원은 이어 고가로 형성된 국내 휴대폰 단말기 시장의 가격 인하를 위해 전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지적, 미래부 장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기도 했다.

특히,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장병완 의원은 인터넷 상의 역사 왜곡, 지역 비하 급증 문제를 지적한 뒤,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 폐쇄 등을 포함한 실효적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경쟁을 촉발시켜야 하나 방통위가 안일하게 대처,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단말기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 최성준 위원장이 한동안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16일 미래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원에 대한 국감에서 장 의원은 국가 R&D 예산 배분에 있어 수도권 등에 비해 호남 지원 비중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래부와 산하 연구재단 등에 지역균형배분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장 의원은 지난 10년간 한수원을 대신해 원전품질보증을 한 특정업체가 위조 부품 비리가 터졌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업체의 모기업이 원전 위조 비리의 재조사와 후속 대책에도 관여했던 사실을 파헤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예산 배분 등 지역 편중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이버사찰 논란 속 텅빈 국감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정부의 사이버사찰 논란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져 국감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2시 국감이 예정돼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장. /연합뉴스

정가라운지

이정현 “3000만원 이하 세금 연체 소상공인, 가산금 탕감해야”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20일 지난 2004년 ‘카드 대란’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세금을 내지 않고 현재까지 연체한 소상공인 일부에 대해 가산금이라도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경영을 하면서 다소의 잘못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면 국가도 함께 책임을 한 번 져줘서 이 부분을 정리해주고 넘어가는 게 소상공인과 저변층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어느 기간을 정해 3000만원 이하로 체납한 소상공인의 가산금을 탕감해주는 사실상의 ‘경제적 사면’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탕감 방안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세법상으로는 원금보단 가산금을 우선해 갚게 돼 있어 도저히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만큼 세법을 개정해 가산금보다 원금을 먼저 갚는 방안으로 가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영순 “목포해양대 해사대학 내년 입학 정원 105명 증원”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입학 정원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5명이 추가 증원된다.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영순 의원은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이 교육부로부터 2015년도 입학 정원 105명 증원 인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주 의원은 해운 전문 인력이 점점 줄어들어 국내 해운업계가 운항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해사대학 정원을 더 늘리기 위해 교육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담당자에게 증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왔다.

목포해양대학교도 단과대별 인원을 조정하는 등 자체 구조개선을 했다. 이에 교육부로부터 60명 순 증원 인가를 받고, 대학 자체 조정으로 45명 증원해 총 105명이 증원된다.

주 의원은 지난해에도 목포해양대의 해사대학 올 입학 정원을 30명 증원하는 데 일조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번 입학 정원 증원으로 해양 전문 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감 브리핑

김승남 “마사회 자문위원 약 30%가 삼성 출신”

‘삼성맨’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이 취임 후 삼성 출신들을 마사회 자문위원으로 대거 영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현재 총 10개 부서에 37명의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한 상태다. 이는 전임 장태평 회장 재임시 자문위원이 4명이던 것에서 9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전체 자문위원 중 11명이 삼성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명은 연구용역이나 컨설팅, 관련 계열사 등 삼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었다. 현 회장이 전경련 상임부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같이 근무했었던 간부 출신도 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문위원들에게 지금까지 총 1억1100만원의 자문료가 지급됐는데 이 중 대부분인 7080만원 가량이 전직 삼성출신 자문위원들에게 지급됐다.

현 회장은 삼성물산 회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삼성 출신 인사로 꼽힌다.

김 의원은 “마사회의 정관을 개정하거나 관련 규정을 고쳐 자문위원의 정원을 제한하고 특정 기업출신이 자문위원직을 독식하고 있는 현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방사청, 부정당 제재 업체에 85억 방탄복 수의계약”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20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 대한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감사원이 방사청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련자 형사고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A업체에 오히려 총 85억6000만원의 방탄복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0년도에 방사청의 ‘다기능 방탄복’ 입찰 적격심사 시 서류를 허위로 꾸며 납품했다가 감사원의 ‘전력지원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실제로 이 업체는 2010년도에 다기능 방탄복, 파편·방호용 방탄복 17억원어치를 납품했다.

이에 감사원은 방사청에 ‘부정당 업자 제재 및 형사고발 조치’를 통보했으나 방사청은 군수조달실무위원회를 개최해 A업체 외에는 조달원이 없다는 점과 적기 조달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방사청은 이 결정을 근거로 A업체와 85억6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데 이어 계약심의회를 개최해 해당업체가 향후에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면책’ 결정을 내리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지경기자 jkpark@